

김영삼 정권기 한국 자본주의국가의 분열 :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김성수* · 유신희**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급격하게 분출되었던 김영삼 정권기를 자본주의국가론의 관점에서, 특히 풀란차스의 국가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민주화를 통해 권위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재벌 독점자본의 한국 사회에 대한 헤게모니가 위협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집권한 김영삼 및 민주계는 중소기업계급을 위시로 하여 도시중산층 등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서, 비록 3당합당을 통해 권위주의 세력과 제휴했지만 계급대표성에 있어서 독점자본을 대표하는 권위주의 세력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기의 재벌개혁을 중소기업과 독점자본의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영삼 정권기의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층위의 구조와 실천을 파악한 뒤, 이와 같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의 계급실천이 국가기구 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자본주의국가, 김영삼 정권, 중소기업계급, 계급갈등, 재벌개혁, 풀란차스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

1. 서론

김영삼 정권기는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라는 한국정치사의 결정적인 사건들 사이에 위치하는 시기로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격렬하게 표출되었던 매우 불안한 시기였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표출에 직면하여 대대적인 경제·정치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혁들 가운데 이 글의 중심적인 분석대상이 되는 재벌개혁은 정권 내내 시도되었지만 끝내 실패를 맞이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중요한 정치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의 개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개혁과정을 단순히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정치체제의 반응으로 상정하고, 개혁의 실패 역시 사회로부터 독립된 정치체제 내에서 취해진 개혁 ‘전략’의 실패로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재벌개혁의 실패는 개혁 반대 및 찬성 세력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된 사회세력을 김영삼 정권이 효과적으로 관리·동원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개혁전략의 실패에 불과한 것으로 된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계급론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사회세력과 정치세력의 연관, 즉 정치세력의 계급대표성에 중점을 두고 재벌개혁을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계라는 중소자본계급의 대표세력에 의한 독점자본에 대한 계급적 투쟁으로 설명하려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은 자본주의국가론, 그 중에서도 니코스 폴란차스의 이론적 작업으로부터 빌려왔다.¹⁾ 자본주의국가론은 한국의 정치를 그것이 고유하게 지닌 특수성이 아닌 자본주의국가로서의 일반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한국 정치의 특수성으로 설명되었던 정치현상들 역시 자본주의국가의 일반적인 구조적 원리 하에 해석할 수 있는

1) 특히 자본주의국가의 일반적 구조를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던 초기의 저작인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Nicos Poulantzas 1973)에 크게 의존한다.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폴란차스의 국가론은 김영삼 정권기 한국 정치의 계급론적 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범주와 개념들을 제공해준다. 폴란차스 국가론은 특정한 정치 현상을 다양한 층위의 구조적 차원으로부터 고립시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차원의 구조와 이 차원들에서의 계급실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즉, ‘중첩결정’된) 결과로서 다루기 때문에, 제도적·환경적 제약 하에서 행해진 전략적 선택으로서 김영삼 정권의 재벌개혁을 분석하고 평가한 기존 논의에 비해 분석의 정밀성과 포괄성을 더해줄 수 있다. 무엇보다 폴란차스 국가론은 사회 내의 갈등과 계급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장소’로서 국가를 상징함으로써 당시 한국 국가에 의해 추진된 재벌개혁을 사회 내의 투쟁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글 전반에 걸쳐 폴란차스 국가론의 개념들이 주요한 설명 및 분석의 범주로 활용될 것인데,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분석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재벌개혁이 진행된 김영삼 정권기 한국 자본주의국가의 정치적·경제적 구조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국가형태와 파워블럭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국가형태의 경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정치적 상부구조로서, 본 논문은 김영삼 정권기 한국 국가형태를 다양한 계급 및 계급분파의 정치적 실천을 위한 정치시장이 개방된 정상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규정하려 한다. 파워블럭의 경우 경제적 차원(층위)의 구조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급 및 분파들의 정치적 통일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본 논의에서 이 개념은 중소자본계급과 독점자본계급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규정된 구조적 조건 아래 각 계급과 계급을 대표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계급적 실천(계급투쟁)을 진행하는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는 각 계급을 대표하는 정치세력들이 각축하는 장소인 정치현장(political scene)

에 대한 분석과, 경실련·재벌 산하 연구소 등의 유기적 지식인 집단이 추진했던 대립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들을 분석함으로써 진행될 것이다. 구조적 조건 하에서 벌어진 계급투쟁이 분석되고 나면, 마지막 4장에서는 이러한 계급실천이 어떻게 국가 내에 반영되었으며 그것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즉, 독점자본과 중소기업의 계급적 이익이 국가 내에 어떻게 상이하게 반영되어 국가기구 내부의 분열을 낳았으며 그것이 상대적 자율성의 상실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김영삼 정권기 한국사회의 정치적·경제적 구조

1) 국가형태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 성격에 대한 규정은 곧 김영삼 정권기 한국 자본주의국가의 정치적 상부구조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국가형태의 차이에 따라 파워블럭 및 여타 사회계급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펼치는 전략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형태와 관련한 기존 논자들의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손호철(2003b, 426-427)의 경우 87년 체제를 상당히 문제적으로 바라본다. 그는 87년 체제가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가장 포괄적인 민주주의의 이념형으로부터 세 단계 후퇴된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제한적·제한적·제한적 민주주의(제한적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수사를 사용해가면서까지 문제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사회변혁을 위한 실천적인 지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그것이 국가형태에 관한 직접적인 서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이념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 격차를 밝힌 것에 가깝기 때문에 해당 국면에서의 국가형태와 계급실천의 관계들을 분석하기 위한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지향에는 적합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규정을 풀란차스의 국가론에 적용할 경우에 발생한다. 풀란차스의 국가이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분석도구들의 적용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그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회피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풀란차스가 『정치권력과 사회계급』에서 다룬 것은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정치적 층위에 대한 특수이론이었으며, 그 실제적인 대상은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 형태였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전제된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 형태가 다름 아닌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Poulantzas 1973, 113). 즉, 풀란차스는 그의 정치부문 특수이론에서 독재나 파시즘과 같은 예외적인 국가형태와 관련된 고찰이 아니라, 보통선거권 등을 보장하는 정상적 자본주의 국가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계급적인 지배가 어떤 식으로 은폐되고 관철되는지에 관한 분석을 제공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87년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 국가를 국가보안법 및 노동악법의 존재라는 상당히 지엽적인 근거들을 들어가며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손호철 2003a, 426-427)은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주의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견해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및 노동악법의 존재가 문제시되더라도,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분석은 “그것을 철폐해야 한다”라는 식의 당위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보통선거권을 비롯한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정당화되는가의 문제로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풀란차스의 설명으로 돌아가 보면, 자본주의 국가의 구조는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지배를 ‘구조적으로’ 담보한다. 일견 모호해 보이는 이러한 명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그의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부에 의한 독재와 관련하여 폴란차스는 그것이 지닌 위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구조로 인해 다원적 정당제에 대한 대체물로 활동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부독재는 지배계급 내의 갈등에 숨통을 터주거나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른 유연하고 점진적인 전략의 변화를 추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에서는 정당간의 유기적인 권력순환 대신에 일관성 없는 정책집행과 자의적이고 급작스런 방향의 변화로 귀결되는 수직적 파벌이나 비밀결사 간의 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Poulantzas 1976, 34, 49-50, 157). 군부독재와 다원적 정당제, 즉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대조하는 이러한 언급에서 우리는 후자의 체제가 어떻게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익에 구조적으로 봉사하게 되는가에 관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독재로부터 민주화로의 이행이 지배적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이 한국의 상황에서 지배적 계급이었던 재벌에 의해 의도 혹은 지지되었는가와 관련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여지가 더 많으며, 이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야 할 주제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중요한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 다소 도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철하는가의 문제이다. 직선제 개헌과 야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그리고 합법적 정권 교체 등의 사례를 떠올릴 때, 우리는 87년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형으로부터 거리가 멀다기보다는 그 본질적인 요소를 충분히 함유하고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87년 체제의 두 번째 정권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기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보통선거권의 보장과 정치시장의 재개방으로 특징지어지는 87년 체제의 근간인 제도화된 민주주의 하에서는 독점자본의 헤게모니가 입법부를 통해서도 구축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는 입법부가 지닌 인민-민중적 대표의 성격 때문인데, 따라서 자유경쟁자본주의의 단계에서는 선거권의 제한 등으로 인해 민중 계급의 입법부로의 진출이 어렵지만 독점 및 국가독점 단계의 자본주의에서는 입법부를 통해 민중 계급의 이익이 대표됨으로써 독점자본은 입법부를 통해 자신의 헤게모니를 구축하지 못하고 행정부로 권력 중심을 이동하게 된다. 폴란차스(1973, 313-16)는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이동이 입법부를 통한 피지배계급의 국가 장악이라는 위협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부르주아 공화국의 제도적인 권력 분립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권력은 국가 내의 특정한 기구(혹은 특정 장소)에 집중되며, 따라서 자유경쟁 자본주의 단계에서 의회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조율한다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행정부의 경제개입을 통해 국가가 계급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행정부로의 권력 이동에서 중요한 사항은 이 단계에서 입법부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된다. 폴란차스는 행정부 우위의 국가에서 입법부는 저항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즉, 인민-민중의 대표로서 자신을 표상하는 입법부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피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부를 중심으로 조직된 독점자본의 정치적 지배,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재생산과 안정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재생산하게 되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서술일 뿐이다. 실제적인 국면에서 어떤 ‘탈구’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 즉 국가라는 정치-이데올로기적 상부 ‘구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정치 층위에서 벌어지는 계급실천에 의해 구조의 논리가 변형(transformation)되는 탈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형태라는 정치적 구조에 대한 규정에서 더 나아가 정치 층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계급투쟁을 살

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김영삼 정권기의 경제적 층위에서의 계급 간의 권력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파워블럭(Power bloc)

김영삼 정권기 한국 자본주의국가에서 벌어진 계급투쟁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적인 과정으로서 계급투쟁의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에는 경제적 층위의 구조적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것은 그 동안 김영삼 정권기의 자본주의 국가형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 국가론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제, 즉 당시의 파워블럭(권력블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풀란츠 국가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파워블럭이란 “자본주의국가의 특정 형태(국가형태)와 연관된 정치적 지배계급 혹은 계급분파들의 특정한 모순적 통일체”를 지칭한다. 간단히 말해 자본가 계급 내부의 지배적인 분파들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는 파워블럭은 그러나 권력을 평등적·다원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파워블럭 내에서도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는 계급 혹은 분파가 존재하며,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파워블럭 전체의 정치적 이익으로 전환하여 파워블럭의 통일성을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사회구성체의 통일성을 달성하려 한다. 즉, 파워블럭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인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재생산을 위하여 이종의 통일성을 달성해야만 하는데, 본질적으로 경제적 층위에서 경쟁관계인 이들을 응집시키기 위하여 자본주의국가는 피지배계급을 끊임없이 탈조직화하는 한편 이러한 이중적인 통일성의 조직화를 돕는다(Poulantzas 1973, 136-7, 140-1, 188-9, 239). 다시 말해, 자본주의국가는 파워블럭을 헤게모니 계급 혹은 분파의 정치적 이익 하에 통일시키는 응집인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역으로

자본주의국가로 하여금 이들 파워블럭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도록 한다. 왜냐하면 헤게모니 분파와 파워블럭 내의 여타 분파들은 경제적 층위(기본모순)에서는 본질적으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국가는 헤게모니 분파들이 여타 계급 및 분파들에게 경제적 이익의 일정 정도를 양보하게끔 강요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파워블럭과 자본주의국가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경제적 층위의 계급관계가 정치적 층위에 반영되는 양상을 독해할 수 있게 된다.

김영삼 정권의 파워블럭 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가설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군사독재 시기에는 파워블럭에서 배제되어 있던 중소기업계급이 민주화 이후 파워블럭으로 편입되었다는 가설(유팔무 1993, 148-153), ② 중소기업계급이 군사독재 시기부터 파워블럭의 구성원이었으며 민주화 이후 파워블럭 내부에서 그들의 지위 상승이 일어났다는 가설(김수행 1993)²⁾, ③ 민주화 이전 및 이후 모두의 시기에서 중소기업계급은 파워블럭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는 가설(손호철 2003a, 433-434).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의 경우 파워블럭은 경제적 지배계급 전체, 즉 자본가 계급 전체가 되며 그 중에서 독점자본이 파워블럭 내부의 헤게모니적 계급 혹은 분파로서 위치했다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의 경우 중소기업은 파워블럭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독점자본들에 의해 파워블럭이 배타적으로 구성되므로 독점자본 가운데에서도 헤게모니 계급 혹은 분파가 추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워블럭이라는 개념의 정의 자체와 관련하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과 같이 중소기업을 파워블럭의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다. 파워블럭은 단순한 계급동맹과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계급동맹의 경우 그것은 계급투쟁 영역의 일

²⁾ 즉 민주화 이전과 이후 모두 국가는 “총자본”(독점자본과 중소기업 모두 포괄하는)의 국가였다는 주장.

정 수준에서만 가능하다.³⁾ 반면 파워블럭의 경우 그 내부에 자본분과 간의 경쟁 등 본질적인 모순이 잠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층위에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통일성을 가지며, 사실상 이러한 통일성이 파워블럭의 통일성과 국가구조의 통일성을 연결짓는 폴란차스 국가론의 중심적인 내용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통일성을 지닐 수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소기업계급을 파워블럭의 구성원으로서 규정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계급과 독점자본계급(한국에서는 ‘재벌’)이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계급실천의 수준에서 과연 동질적인가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동질성 여부는 우선 경제적 층위에서부터 강한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독점자본계급 내에서도 전두환 정권 당시 승용차사업을 두고 각축을 벌인 현대와 대우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인 갈등이 벌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소기업과 독점자본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 중소기업계급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하는지가 문제되겠지만 개발독재기의 배타적인 재벌중심적 국가정책을 상기할 때 그들이 경제층위에서 상대적인 동질성을 가졌다고 규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중소기업은 재벌의 하청업체 혹은 독재국가의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에서 배제된 중·소규모의 내수 관련 사업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재벌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착취적인 관계에 가까웠다는 것이 한국의 특수성에 걸맞는 해석일 것이다.⁴⁾ 대기업집단의

³⁾ 예를 들어, 어떤 두 계급의 정당 간의 정치적 동맹이 맺어질 경우에도 경제적 층위에서는 계급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제적인 동맹이 결성되더라도 정치적 층위에서는 정당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두 계급의 적대가 진행될 수 있다.

⁴⁾ 1987년 제조업 내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95.9%였고 이들의 고용은 제조업 고용의 62.9%를 차지했으나, 이들 중소기업의 존립영역은 48.5%가 하청기업이었다. 또한 1993년의 경우 103개 재벌 계열기업은 30,233개의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으로 거느리고 있었고 일부 기업은 1천개가 넘는 하청기업을 거느리고 있었다. 1995년의 경우 32개 재벌 계열기업은 총재 자신이 제조하던 1,744개의 품목의 사업을 303개 중소기업으로 이양하였다(이재희 1999, 56-57).

하청이나 국내의 소규모 시장에 의존하는 이들 중소기업들의 실정에 반해 국가는 위계적이고 강압적인 수출주도 중심의 대기업 집중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또한 위기 시에는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독점자본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이며 개발독재국가-재벌의 공고한 연결을 증명하였다(전창환 2004).

이는 중소기업이 경제적 층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파워블럭의 조건 중 가장 기본적인 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워블럭은 헤게모니분파의 독점적인 정치적 이익 하에 조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응집인자로서의 기능으로 인해 파워블럭 내부의 분파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의 흐름이 보장된다. 때문에 한국의 재벌-중소자본 관계와 같은 착취적인 관계를 두고 재벌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했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상 풀란차스가 파워블럭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목적과 당시 한국의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다. 풀란차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봉건적 생산양식 등 다양한 생산양식의 접합으로서의 자본주의 사회구성체 내에서 지배적인 (각각 금융, 산업, 상업 분파로 나뉘는) 부르주아 계급과 봉건적인 대지주 및 토지귀족계급이 어떻게 특정 부르주아 분파의 헤게모니 하에 파워블럭으로서 조직화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목적에 충실하게 한국 상황을 분석한다면, 한국의 경우 토지귀족이 일찍이 몰락했으며 군사독재에 의해 계획적으로 육성된 재벌 대기업집단이라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독점적 산업(그리고 80년대 이후부터 원시적으로 금융적이기도 했던) 부르주아들이 배타적으로 국가권력과 관계망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풀란차스 그 자신은 독점자본주의론에 반대하여 독점자본주의 단계에도 국가는 독점자본의 국가가 아닌 총자본의 국가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현대적 ‘신화’를 타파할 것을 역설했지만(손호철 1993,

95), 지금까지 논의한 한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할 때 중소기업가 계급은 독점자본과 통일성을 지니지 못하며, 따라서 파워블럭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금융·유통·산업 등 계급 ‘분파’가 아니라 독점자본에 예속된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점자본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층위에서의 분명한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가론자들이 파워블럭 규정 문제를 두고 혼란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정치적 수준과 관련된 중소기업가의 지위이다. 사실상 중소기업가 계급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민주화 과정 및 민주화 이후의 국면에서 중소기업가 계급의 정치적 대표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한 그들이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의 정치현장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계급실천에 의한 ‘탈구’의 문제와 관련된다.

3.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의 계급실천

1) 정치현장에서 중소기업계급의 부상

김영삼 정권기 자본주의국가의 파워블럭 규정에 있어서 혼란이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 층위에서 중소기업 대표세력의 부상이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치현장(political scene)이라는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치현장이란 정치적 계급실천 수준에서의 특정한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정당으로 조직된 사회세력들 간의 투쟁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현장에서의 존재 및 이 현장에서의 계급의 위치는 정당에 의한 계급대표성의 양식 및 정당 간의 관계와 연관된다. 또한 정치현장은 레짐형태(정권형태)의 개념

과 연관되는데, 레짐형태란 자본주의국가의 고유한 구조, 정당대표체계의 좌표, 선거제도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 정치적 시기구분으로서 파워블럭의 변동과 연계되는 국가형태의 개념보다 한 단계 낮은 시기구분 개념이다(Poulantzas 1973, 153-156). 특정 계급에 대한 대표성을 선언적이고 공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치 층위에서 활동하게 되는 정당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정치현장의 개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부상이 두드러졌던 당시 한국 정당정치를 정치적 계급실천의 한 양상으로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작업은 김영삼 정권의 계보를 추적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화 시점과 3당합당의 국면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는 독재국가와 독점자본의 헤게모니가 심대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중산층, 뿌띠부르주아, 노동계급 등 과거 독재국가의 지지계급⁵⁾이었던 세력들이 야당이라는 민주화진영과 새롭게 동맹했던 것에 본질적인 원인을 갖는다. 87년 민주화의 계급론적 분석을 위해서는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민주화 이후 13대 대선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지역주의 구도가 지지계급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의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에서 증명되었듯이, 지역주의는 한국사회 내의 계급적인 균열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최장집 1991; 1996; 박상훈 2009, 57-59).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 내부에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분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의 구도는 이러한 계급적 균열을 무시하는 지역적으로 분할된 정치적 지지의 분포를 보여준다. 나아가 일견 호남·경북·경남의 지역적 분할로

⁵⁾ 자신의 계급과 직접적인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세력을 (주로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포에 의해 촉발된)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의해 지지하는 계급들을 의미한다. 이들의 지지는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형태에 대한 지지로서 표출된다. 즉, 이 경우에는 민주화 이후의 국가형태를 지지하는(동시에 민주화 이후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경계하는) 중간계급 및 도시중산층 세력을 의미한다.

보이는 13대 대선 결과는 그 본질에 있어서 민주화 진영의 지도자인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지배적인 정치균열은 민주 대 반민주(권위주의) 구도였던 것을 알 수 있다(박상훈 2009, 146-148).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전국적인 견지에서 피지배계급 구성원의 상당수는 민주화 진영의 지지계급이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렇듯 독재국가의 지지계급을 포섭해낸 민주화 진영은 그렇다면 어떠한 계급대표성을 띠고 있었는가? 우선 12대 국회의원들을 출신경력이라는 정당의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파악할 경우,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주요 경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 부류는 주로 중소기업의 사장, 이사 등의 중소자본가가 대부분이고, 소수의 대기업의 기능적 자본가(CEO, 이사 등) 경력을 지닌 의원들을 예외로 들 수 있다. 둘째 부류의 국회의원은 처음부터 야당 정치인으로 일관했던 직업적 정치가들이다. 이 두 부류 외에 몇 명의 변호사,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있었다(임지혁 1988, 73-74). 또한 통일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출신계급의 경우 전체 50명 의원 중에 중소자본가 출신 23명, 직업정치인 21명, 법조계 2명, 기타 4명이었다. 이러한 계급적 성격은 3당합당 이후에도 민자당이 표방하는 정강정책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제력집중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분야를 구분하여 중소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의 개정도 내세우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이로부터 민자당의 정강에 계열기법 주력업종의 전문화유도, 창업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노동관계법의 개정 등 독점재벌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노사관계를 합리화하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정영태 1995). 즉, 정강과 정당 구성원의 측면에서 중소자본의 계급적 대표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가운데(채만수·김장한 편 1990, 109-114 참조) 이들 민주화 세력들은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적음에도 ‘민주화’와 ‘지역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뿌리부르주아들과 일부 노동민중을 지지계급으로 포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계급대표성과 관련지를 경우, 1990년의 3당합당은 레짐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독점자본을 대표하는 권위주의 세력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신민주공화당은 계급대표성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민주화 세력으로서 중소자본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대표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지계급을 포섭하고 있었다. 따라서 3당합당을 단순히 ‘보수대연합’으로 규정짓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3당합당은 ‘보수’라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동질성을 지닌 세력들의 결합일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 경제적 층위에서 화해불가능한 관계를 맺고 있던 중소자본과 독점자본이라는 이질적인 두 계급을 대표하는 정당 간의 연합으로서, 그것은 정치적 계급동맹이라고 정의되어야 옳다.

독점자본 분파 및 이들의 대표자인 권위주의 세력의 관점에서 3당합당이라는 계급동맹의 필요성은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의 과반수 획득 실패로 인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생겨났다. 이 역시 독점자본의 헤게모니가 붕괴되었다는 또다른 증거이다. 민주화로 인하여 정치시장의 재개방과 민주화 진영의 지도자인 양김씨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보장이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억압 하에서의 경제발전을 통해 인민-민중의 대표자임을 내세웠던 군부정권의 정당성이 크게 도전받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해진 3당합당은 따라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지니고 있는 인민-민중적 대표성을 흡수하려는 당시 파워블럭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경제적 층위에서 너무나 상이한 이해를 지니고 있던 계급 간의 동맹이었다. 이처럼 불안한 계급동맹은 당 내 계파간 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민주자유당의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자당 내부적으로 김영삼·민주계에 의한 민정계 밀어내기가 격화되

면서 일부 민정계 의원들과 노태우 대통령의 탈당 등의 일련의 정치적 사태 끝에 민주계의 헤게모니 하에 당 내 권력투쟁이 종식되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도 14대 대선이 비록 3당합당 이전 3당의 득표율보다 35%가 적은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김영삼 및 민주계가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이었던 영남권에서 높은 의석획득률을 얻어냄으로써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오히려 14대 총선의 경우 민자당이 영남권에서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계기였으며, 이는 그 역시 중소자본 계급대표성을 보이는 (평화)민주당의 호남권 장악과 더불어 3당합당 이후 정치현장에서 중소자본의 지위가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14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계의 주도 하에 민자당에서 김영삼이 후보로 선출된 시점에서, 즉 중소자본과 독점자본의 정치적 계급동맹이 중소자본 대표자들의 승리로 잠정적 종결을 맞은 시점에서 매우 특별한 정치적 현상이 발생한다. 독점자본 그 자신이 통일국민당이라는 정당을 조직함으로써 정치현장에 진입한 것이다. 노태우 정권에서 계속되었던 경제개혁의 실패와 3저호황의 종식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정치현장에서 독점자본 대표세력의 축소와 더불어 독점자본의 전 국가적인 헤게모니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했다. 정주영의 대권 도전은 이러한 맥락에서 대선 승리를 통해 인민-민주적인 헤게모니를 재확립하고자 했던 독점자본 분파의 정치적 계급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김영삼과 민주계에 의해 민자당으로부터 축출된 일부 민정계 의원들이 국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즉 정치현장에서 독점자본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재조직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4대 대선은 김영삼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아가 독점자본의 직접적인 정치현장 진출까지 포함해서 김영삼의 집권 과정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수립되었던 독점자본의 헤게모니가 붕괴의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풀란차

스는 민주화를 통한 정치시장의 재개방은 단지 행정부에 의한 독점자본의 헤게모니 확립을 돕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입법부를 통해 피지배계급의 이익이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14대 대선이 과연 단지 중소자본을 포함한 소외된 계급의 이익이 일부 반영됨으로써 독점자본으로 구성된 파워블록의 헤게모니 하에 체제를 유지하는 ‘저항’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에 그쳤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김영삼 일파가 계급대표성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김대중 일파와 함께 입법부의 다수를 차지했으며, 더불어 김영삼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 등극했다는 것에 있다. 즉, 중소자본 계급대표성을 지니는 정치세력이 통치계급⁶⁾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폴란차스의 정식화에 의거할 때, 통치계급이 반드시 지배계급일 필요는 없다. 앞서 보았듯이 행정부 우위의 국가에서 의회는 단지 행정부를 통한 파워블록의 헤게모니 조직을 기능적으로 보조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기에는 다른 양상이 벌어졌다. 김영삼은 1979년부터 지속되었던 재벌 합리화를 위한 경제개혁에 그치지 않고 한국 자본주의의 지도적 세력을 재벌로부터 중소자본으로 대체하려는 차원에서의 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통해 독점자본으로 구성된 파워블록의 헤게모니가 매우 약화된 시점에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층위를 매개로 한 중소자본의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2) 중소자본과 독점자본의 헤게모니 프로젝트

중소자본계급과 독점자본계급 간에 벌어진 이데올로기적 층위의 실천

⁶⁾ 통치계급(ruling class) 혹은 분파들이란 정치현장에서 자신의 정당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계급 혹은 분파를 의미하며, 이는 파워블록의 일부인 ‘정치적 지배계급’(헤게모니 계급)과 구분되어야 한다(Poulantzas 1973, 246-7, 249).

을 분석하기 위해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개념을 활용하기로 한다. Jessop (1990, 207-209)에 따르면, 광의의 헤게모니는 특정 계급 및 분파 혹은 이들의 정치적·지적·도덕적 대변자들의 지도력 하에서 다양한 계급 관련 세력들을 호명하고 조직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도력의 핵심은 특수이익과 일반이익 간의 갈등이라는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수한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특수이익은 무한에 가까운 다양성에 의해 사실상 일반이익으로 전환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전환은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 국민적·대중적 행동 프로그램의 지지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통한 특정 계급 혹은 분파의 장기적 이익 추구는 단기적 이익의 희생과 여타 세력에 대한 물질적 양보의 흐름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헤게모니 프로젝트에 양립할 수 없는 특수이익은 결과적으로는 비도덕적 혹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배제된다는 점에서, 일반이익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갈등적·투쟁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그 형성 과정에서 저널리스트, 정치가, 학자, 기술자 등과 같은 특정 계급 세력을 대변하는 유기적 지식인에 의해 정교화된다(Jessop 1990, 214). 따라서 김영삼 정권기 한국 사회에서 추진된 대립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급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는 않지만 그들의 지적·도덕적 측면을 대표하는 유기적 지식인들의 실천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논의의 구체성을 위해 유기적 지식인들에 의해 유포된 중소기업계급과 독점자본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인들에 의해 추동된 이데올로기 수준에서의 투쟁에는 당시 국면적으로 한계를 가하는 요인이 있었다. 바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침투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경제적 충위에서의 변동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담론들이 하나의 도그마로서

경제학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지식의 수입 및 수출을 통해 경제운영에 대한 진단과 전망의 담론을 제약하였으므로,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지구화, 혹은 구체적으로 개방 압력에 직면한 한국의 상황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적 지식의 횡행으로 인해 경제와 관련된 실천적 담론이 제약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 김영삼 정권의 경제개혁에 관한 대립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결국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둘러싸고 그 구체적인 전략에 있어서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담론이 일정한 탈구를 겪었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에서 완전한 신자유주의체제로의 전환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체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즉, 97년 이후 IMF에 의한 강제적인 개혁이 있기 이전까지는 한국은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세계적 차원의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공세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기 헤게모니 투쟁의 분석은, 신자유주의 담론에 의해 담론 시장이 세계화에 대한 전략으로 한계지어진 상황에서 그것이 국내 계급투쟁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탈구되어 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삼 정권 재벌개혁 정책의 기반이 되는 시민사회 내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중소기업육성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점재벌의 소유분산과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전환,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거래규제 등 재벌규제정책은 “독점 재벌기업들이 개방화의 국면에서 외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보다는 특혜와 지대획득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크며, 이러한 가능성은 재벌의 총수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커진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쟁이 도입되지 않은 규제완화는 독과점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등 독과점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제화시대에

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적정규모를 지니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기술집약형 생산에 유리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강철규 1994).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육성론을 파악하는 데 있어 경계해야 할 것은 ‘합리적 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의 살 길’ 등 이 담론의 수사에 현혹되어 이것을 하나의 총자본적인 입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영태(1995)의 경우 경실련⁷⁾의 위와 같은 주장을 참조하여 이러한 정책제안을 총자본 이해의 대변이라고 파악했는데, 이 같은 결론이야말로 당시 중소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분석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헤게모니 투쟁은 하나의 지배적인 분파가 자신의 배타적인 ‘경제적’ 이익을 파워블럭 내의 다양한 분파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파워블럭 내부의 계급들은 기본모순의 층위에 있어 경쟁하는 자본분파로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립의 계기가 잠재하지만, 그 중 지배적인 분파는 그러한 이익의 갈등을 자신의 이익에 대한 지배적인 주장 하에, 즉 헤게모니 하에 통합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비록 지배분파의 헤게모니에 의해 파워블럭의 통일성이 달성된다 할지라도, 파워블럭의 구성 분파 간에는 여전히 대립의 계기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중소자본계급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총자본의 순수하게 융합된⁸⁾ 이해를

7)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우 90년대를 전후로 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시민’ 운동 세력으로서 소액주주운동 및 부동산투기 반대 운동 등 전형적인 ‘중산층’, ‘시민’, ‘중민’ 운동을 전개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8) 이는 파워블럭의 이익이 갈등의 계기 없이 말그대로 하나로 응집함을 의미하며, 정치적으로는 파워블럭 내부 분파들이 권력을 ‘분점’함을 의미한다. 폴란차스는 이를 화학적 메타포를 사용하여 ‘융합’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나 폴란차스는 자본주의 국가의 헤게모니 계급은 “절대로 권력을 포기하지도, 분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분파 이익 간의 융합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대변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의 살 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론의 경우 그것이 경실련의 주장에서는 일차적으로 경쟁적인 세계의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보편적 이익’으로 제시되고, 특수하게는 한국 자본주의의 생존 전략(총자본의 생존 전략)으로서 제시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중소기업육성의 경제적 육성, 즉 토대에서의 지위 상승 및 중소기업육성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였음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에 기초한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계급실천인 재벌개혁에 대한 저항은 다층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우선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수준에서 재벌은 신자유주의 프레임 속에서 재벌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주로 재벌 산하 경제연구소, 대표적으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어 각종 언론 및 재벌과 연계된 정부부처를 통해 시민사회와 국가 내로 침투되었다. 이러한 기제에 의해 유포된 담론은 주로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서 재벌체제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식의 주장이었으며, 대표적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른바 ‘2류·3류·4류론’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정당화를 꾀했다(김상조 1998, 186)

재벌집단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운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경제위기 국면 하의 위기극복전략으로서 1996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이른바 ‘고비용-저효율구조론’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고규제, 고소비 등 6종의 벽이 가로놓여 있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없고 이러한 저효율은 다시 고비용을 유발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비용의 한국병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서 정부가 지목되고 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과잉개입, 즉 노사관계 합

리화, 호송선단식 금융정책, 공급규제 일변도의 토지정책,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린 SOC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자원의 고비용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축적위기의 원인제공자로 정부를 지목하고, 그 대안으로 규제완화와 철폐를 내세우는 재벌의 이와 같은 주장과 함께, 재벌은 경쟁력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맞춘다. 축적위기의 핵심이 가격경쟁력 상실에 따른 수출부진에 있다는 분석을 광범위하게 유포시킨 가운데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술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비용인하를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고비용-저효율구조론은 재벌 독점 자본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였다(정건화·김상조 1996).

재벌의 저항은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유포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치에 맞서 국가 내부로 침투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저항을 전개하는 한편, 이와 같은 계급투쟁에 의해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자 경제적 층위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피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무한대로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국면, 즉 국가자율성의 상실과 이에 기인한 재벌의 통제받지 않은 계급실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 자본주의국가의 분열과 상대적 자율성의 상실

1) 관료 및 국가기구의 분열

국가기구 내부를 분석하기에 앞서, 김영삼 정권의 경제개혁은 중소기업 계급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도 일방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세계화 논의는 단순한 이데올로기 차원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와 OECD 가입으로 인한 경제개방 국면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경제운영방향과 개혁에 관한 논의가 세계화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담론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 체질 개선 논의는 어떤 한 입장에 의한 일방적인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달성 방법에 있어 앞서 보았듯이 심각한 견해 차이를 불러일으켰다. 즉, 개방 압력에 직면하여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재벌집단이야말로 독과점 및 비관련 다각화로 인해 한국경제에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킨 주범이며, 따라서 재벌을 개혁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앞선 논의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면 이는 곧 개방 압력 하에 경제운영 방향의 전환을 두고 경쟁력강화라는 지상목표가 대두되었지만 김영삼 정권의 계급적 성격과 재벌 독점자본의 이해가 충돌한 결과, 그 실현의 방향에 있어 재벌에 대한 개혁이나 지원이나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시민사회 내의 대립되는 노선이 국가기구 내에 어떻게, 무엇을 매개로 반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모니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변형되었는가와 관련된다.

개혁방향을 두고 벌어진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국가기구 내부로의 반영은 국가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료들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두 노선을 대표하는 관료들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먼저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세력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관료들을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강경식, 한이현, 김인호 등을 필두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관료집단은 이미 박정희 정권 시기였던 79년부터 경제안정화시책 등을 통해 재벌집단을 규제하고 그들이 초래한 과잉투자를 시정하려 했으며, 80년 신군부의 집권과 함께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김재익의 리더

십 하에서 그가 사망하던 85년까지 강력한 안정화정책을 추진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통화주의의 세례를 받은 세대로서, 과도하게 확장적이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재벌집단 주도의 한국경제를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기업운영원리로 하는 서구의 선진적 모델로 개혁하기 위해 매진했던 이들이었다. 따라서 80년대부터 추진된 한국경제의 개방화 및 자유화 흐름을 단순히 재벌집단의 이익추구 혹은 재벌집단이 국가의 우위에 올라선 결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개방은 최소한 신자유주의적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재벌개혁을 그 필수적인 선결요건으로 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신자유주의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족벌이 아닌 주주들에 의해 운영되며 따라서 독과점적 지위를 추구하는 무리한 확장적 경영을 자제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기업체제가 자리 잡혀야만 경제 자유화가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관료들이 다분히 이상주의적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면, 반면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관료집단이 존재했다. 이러한 실무적 관료군의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서강학파’로 불리며 박정희 정권기 경제주무처의 전선에 위치했던 관료들이다. 이들은 그러나 단순히 개발독재적 관료로서 특징지어질 수는 없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기 국가주도적인 경제운영, 대표적으로 중공업화와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세력은 박정희 대통령 자신과 공학자 출신의 오원철 경제수석 같은 인물들이었으며, 사실상 남덕우, 이승운 등 서강학파 경제관료들이 맡았던 업무는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박정희식 경제개발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무엇보다 그러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실무적으로 가능케 만들 정책수단을 구상해내는 것이었다(박지훈 2006, 23-25). 즉, 서강학파는 개발독재 기간에 그러한 개발 프로젝트의 주도적 인물로서 활동했다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기술’ 관료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다. 사실상 이들의 전문성은 신고전파 종합으로서, 국가의 경기부양 및 조절을 인정하기

는 하지만 경제운영의 전체적인 무게는 시장에 두어야 한다는 이론적 입장으로, 시장주의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통화주의 전문성을 지닌 신자유주의적 관료들과 본질적으로 입장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었다(남덕우 2010, 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에 보다 충실했고, 신자유주의 관료들의 이상주의적 성향과 행태에 비해 실무적인 정책조율 및 경제개발기에 재벌집단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경험에서 비롯되는 보다 현실적인 경향을 지녔다. 따라서 다소 도식적이지만, 서강학파를 비롯하여 실무적·현실적 지향을 지닌 관료들을 성장지향적이고 상대적으로 친재벌적인 관료집단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관료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분열은 국가기구의 부서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국가기구 내부의 부서별 분열은 관료집단의 부서별 분포에 따른 일률적인 결과가 아니라, 정책대상집단의 차이라는 요인도 작용한 결과였다(윤종근 1999, 21-25). 즉,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 특정 대상집단을 지닌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관계했으므로 사회 내의 경제 및 계급세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기획원의 경우 박정희 정권기부터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에 비판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지향을 보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부서 자체가 재벌에 대한 감시와 개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재벌집단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대표적으로 상공부와 같은 경우 정책대상집단 자체가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지분을 점하고 있는 재벌집단들이었으므로 이들은 재벌집단을 국가와 매개하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상공부에 의해 추진된 개혁들은 재벌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으며, 타 부서의 개혁에 대해서도 그것이 재벌 규제적일 경우 재벌 산하 연구소에서 나온 반대논리가 상공부의 보고서 형태로 상부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95년 역플라자합의를 기점으로 엔고호황이 종식되면서부터 사상최대의 경상수지적자 등 외부충격에 의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앞서 보았던 것처럼 경제위기를 강조하는 재벌의 정당성이 이데올로기 층위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내부적인 원인은 김영삼 정권의 경제개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가가 재벌을 비롯한 여타 사회계급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데 있었다. 통제력의 상실은 국가기구 자체의 내적인 분열에 기원을 둔 것인데, 이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통치계급과 국가관리계급(governing class)의 분열에, 이차적으로는 국가관리계급 내부의 분열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먼저 전자의 경우 통치계급은 중소기업계급을 대변하는 김영삼 및 민주계였던 반면 국가관리계급 상층부의 다수는 독점자본계급과 유착되어 있던 개발독재국가의 관료들로서 이러한 비조응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국가관리계급 내부의 분열로서, 재벌개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개혁을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적-재벌개혁적 관료와 경기후퇴 국면에서 경기부양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재벌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성장지향적-친재벌적 관료로 분열된 국가관리계급의 경우 중소기업과 독점자본 간의 상충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국가 내부의 응집인자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떤 세력도 확실한 우세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 내부에서 상당 기간 동안 통일성이 구축되지 못하는 혼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2) 상대적 자율성의 상실과 파국으로의 이행

국가기구 내부의 혼란과 통일성 부재는 계급실천 수준에서의 파국적 세력균형과 관련 있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소기업은 도시중산층과 중간계급 등 뿌리부르주아 계급을 지지세력으로 삼아 통치계급으로 등극하였다. 이는 물론 정치현장 내에서는 이들 계급의 우위를 보증하는

것이었지만 경제적 층위에서의 본질적인 취약성(내수기업)과 종속성(하청 기업), 친재벌적 관료층을 매개로 한 국가기구나 독점자본 간 네트워크의 존속으로 인해 중소자본의 헤게모니는 쉽게 달성될 수 없었다. 이에 더하여 민주노총의 설립과 현대파업사태 등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투쟁이 강화되어가고, 국제적으로도 시장개방의 압력과 국제경기의 변동으로 인해 경제상황의 악화가 도래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영삼 정권의 재벌개혁은 초기의 강력했던 추진력을 잃게 된다. 예컨대 93년 7월 초에 발표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경우 초기에 보였던 독점재벌에 대한 규제 중 중요한 정책수단들을 결여하고 있었다. 즉,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에 있었던 주력업종선정기준 중 기업공개여부와 소유분산정도가 빠졌고, 소유분산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소유분산정도에 따른 출자규제와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가 삭제되었다. 정경유착의 네트워크를 분쇄하기 위한 시도였던 금융실명제의 경우에서도 재벌에 대한 규제는 미미했으며, 이후 오히려 여신관리를 축소하고 그 대상도 10대그룹으로 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재벌의 ‘협조’를 얻는 데 주력을 기울이게 된다. 마침내 95년에 들어 김정권의 재벌정책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규모 직권실태조사 계획’에서 그 무력화된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출범 초기에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까지 고려하면서 재벌계열사의 기업확장을 억제하려 했다가, 95년에 들어서는 소유분산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명목 하에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있어 적용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규제수단은 완전히 제거된 명목상의 규제정책으로 전락하고 만다(정영태 1995).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규제 시도마저 96년에 이르면 궁극적인 실패를 맞게 된다. 96년 김영삼 정부는 재벌정책의 초점을 경제력집중 억제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으로 바꾼 신재벌정책을 발표하는데, 이에 따르면 11위 이하의 재벌에 대한 여신 제한이 풀리고 6대 이하

재벌이 보험회사 주식을 인수하거나 보유할 수 있게 된 반면,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사외이사제, 수액주주권 강화,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은 모두 연기되었다(조영철 1998). 이는 정부가 재벌의 규모와 경제력을 억제하려고 했던 시도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재벌규제와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아닌 재벌 일변도의 경쟁력 강화 노선으로 완전히 선회했음을 증명한다.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시장 지향적인 재벌정책이 성장 지향적인 친재벌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김상조 1998, 183, 191).

동시에 이러한 경제개혁의 좌절이 보여주는 것은 국가가 재벌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독점자본에 대항한 헤게모니 투쟁이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이 재벌에 맞서면서 국가기구 내의 개혁을 수행하고 이러한 개혁이 친재벌적 관료들에 의해 다시 좌절되는 과정에서 재벌은 국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게 되었다. 반대로 말하면 초기의 강력한 개혁 추진 국면과는 다르게 본격적인 개혁과정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저항으로 인한 국가의 응집성 상실 및 헤게모니 확립의 실패에 의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지극히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는 통치되지 않는 재벌 집단의 폭주였다. 1980년대 이미 증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된 재벌은 90년대 중반에 금융을 관리하던 개발국가의 후퇴 국면에서 막대한 해외차입에 의존한 공격적인 투자에 매진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2000년까지 해외사업장 1,000개를 구축하겠다는 대우의 ‘세계경영’ 구상, 그리고 삼성, LG, SK, 삼미, 해태 등의 글로벌 인수합병 등 결과적으로 과잉투자로 판명된 기업활동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정구현 외 2008, 52). 재벌개혁적 측면이 거세되고 재벌지원책으로서의 성격만 지니게 된 주력업종제도의 정책결과 역시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94-95년 반도체 특수와 엔고 국면에서 삼성·현대·LG는 반도체부문에 천문학적 투자를 거듭했고 한보는 5조원대의 거금을 차입해 제철소를 세웠으며 쌍

용·기아 등은 생산라인 확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투자·생산은 엔고의 반전과 반도체 특수의 증식 및 반도체 가격 대폭락으로 인해 한국경제를 급격하게 위기로 몰고가게 된다(윤종근 1999, 48)

이처럼 개혁이 단기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긴 기간의 투쟁을 겪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국가와 파워블럭의 통일성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계급투쟁의 결과 헤게모니적 분파에 의해 파워블럭과 사회구성체가 통일적으로 조직된 후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의 기나긴 개혁, 그것도 개혁의 결과적인 실패로 향했던 도정은 김영삼 정권과 중소기업, 친재벌적 관료와 독점자본, 노동세력 사이의 팽팽한 세력균형으로 인해 그 중 어느 자신도 자신의 이익을 전 사회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고 단지 일방적인 개혁을 거부할 힘만을 지닌 ‘파국적 균형’을 형성했다(지주형 2011, 152). 국가가 자본을 조직화할 힘을 상실한 시점에서 독점자본은 3저호황에 의해 축적한 이윤과 국제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무리한 단기외채를 축적했으나, 국가는 이러한 단기자본 유입을 관리하고 규제할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 더불어 국가의 무능력은 합리적인 투자조정능력의 상실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재벌은 정부로부터 자동차(삼성)와 철강(현대, 기아, 한보)같이 이미 설비 과잉인 산업에 대한 진입을 허가받게 된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강권통치 아래에서, 즉 통일적으로 조직화된 파워블럭과 국가의 관계 하에서 가능했던 산업의 장기적 이익에 대한 고려는 계급투쟁으로 점철된 김영삼 정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국가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한 과잉투자와 과잉설비는 재벌에게 막대한 금융비용을 짊어주었으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외환위기라는 대 파국이였다.

결론적으로 김영삼 정권의 계급지형을 묘사하는 가설로서 2장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가설은 모두 부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중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세 번째 가설, 즉 파워블럭은 민주화 이전·이후 모두의 시

기에서 배타적으로 독점자본(재벌)이었다는 가설 역시 파워블럭의 헤게모니가 붕괴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동태적인 계급투쟁을 묘사해주지는 못한다. 독재국가에서 파워블럭이었던 재벌집단의 긴밀한 계급적 동질성은 유지되었지만, 정치적 계급실천의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뿌뿌 부르주아와 노동계급 일부를 지지계급 및 동맹계급으로 삼은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계가 김영삼의 정권획득과 함께 정치현장에서의 통치계급으로 부상했다는 점에 있다. 문제는 이렇게 통치계급화 한 중소기업계가 독점자본의 헤게모니 하의 파워블럭으로 편입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통치계급은 헤게모니적인 계급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조직하기보다는 김영삼의 대대적인 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독점자본계급에 대한 계급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처럼 계급투쟁의 연속으로 점철된 김영삼 정권기의 한국 자본주의국가는 그 자체의 분열로 인해 사회구성체의 통일성 달성에 실패했으며, 이는 자본주의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상실, 즉 국가에 의한 총자본적 관점에서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경제관리의 부재와 이로 인한 사회구성체 재생산의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

5. 결론

지금까지 김영삼 정권의 재벌개혁이 사회구성체 내부의 여러 층위의 계급실천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계급투쟁의 확대와 지속은 자본주의국가에 의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통일성을 가져오지 못했고, 그 결과 이러한 파국적인 균형은 사회구성체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자본주의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극도로 축소시킴으로써 결국 외환위기의 형태로 표출된 사회구성체 존립의 위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질적으로 김영삼 정권기의 파국적 균형은 정치현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중소자본계급이 경제 층위에서는 독점자본에 철저히 종속적이었다는 지점에 기인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급투쟁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전제가 현실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식의 연역으로 일관하는 분석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이 글이 의도한 바는 한국 정치를 단순히 특수성과 일반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양식 및 그 상부구조로서의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이론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한국적인 특수상황들이 어떤 본질적인(여기서는 계급적인) 기원을 갖는가를 분석하려 한 것에 있다. 이와 더불어, 계급론적인 분석틀을 적용함으로써 정치국면의 변동에 대한 분석에 있어 기존의 분석틀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새로운 범주들을 활용할 수 있었음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층위나 경제적 층위에서의 '정치'적 투쟁에 대한 조명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획정된 정치적 층위(정치현장)나 정치적 상부구조로서의 국가 역시 다른 층위들과 연관된, 나아가서는 다른 층위에서의 규정을 '중첩결정'하는 장으로 다룸으로써 정치 분석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 자본주의국가론이 제공하는 분석에의 기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분석시기 상 중첩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해 언급하자면 그것은 바로 노동계급과 관련한 문제인데, 사실상 자본주의국가의 형태변화와 계급투쟁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은 노동계급의 조직화 정도이다. 자본주의국가는 그것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종속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피지배계급에 대한 탈조직화를 끊임없이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흔히 상대적 자율성 개념이 적용되는 사례에서처럼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이들의 정치적 지배를 보장한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는 노동계급의 조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김영삼 정권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 국면이었지만 민주노총의 설립 등 그 잠재력은 가시적인 계급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의 복잡성 등의 제약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포함한 전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지역주의 연합’ 혹은 ‘보수대연합’ 등 동질적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민자당이라는 정치세력 내부의 계급적 대립을 살핌으로써, 노동계급은 제외되었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계급대립을 살펴볼 수 있었다.

끝으로, 본 논문의 포괄범위인 김영삼 정권의 시기를 초과하기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 즉 결과적으로 한국 자본주의국가의 조직화가 어떤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간단히 서술함으로써 글을 마치겠다. 그것은 IMF 외환위기의 파국 이후 독점자본에 의한 헤게모니 및 파워블럭의 통일성의 '재확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MF 체제에 의한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비록 그 중 몇몇 분파의 소멸을 겪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지배력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파국 이후 중소기업과 노동계급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지배적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마치 예정조화적으로 이루어진 재벌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며, 대외적인 국면에 대한 재벌 자신의 계급투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국면과의 상호작용 가운데에서도 재벌이라는 한국 독점자본 계급이 자신들의 독자성을 지켜냈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계급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요청된다고 본다.

(2013년 4월 7일 접수, 4월 20일 심사완료, 4월 21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철규. 1994. “국제화시대의 재벌정책.” 『경제정의』 .
- 김상조. 1998. “김영삼정부의 개혁실패와 경제위기.”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 당대.
- 김수행. 1993. “한국사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사회비평』 제9호.
- 남덕우. 2010. “선진화를 향한 도전과 한국정치의 과제: 남덕우 전 국무총리 인터뷰.” 『한국정치학회 소식』 .
- 박상훈. 2009. 『만들어진 현실』 . 후마니타스
- 박지훈. 2006.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1979년 4월~ 1998년 2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손호철(2003a). “김영삼정권의 국가성격.”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 사회평론.
- 손호철. 1993. “니코스 폴란차스” 『이론』 .
- 손호철. 2003b. “문민정부와 정치개혁.”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 사회평론.
- 유팔무. 1993. “개혁시대 민중운동의 총노선.” 『말』 .
- 윤종근. 1999.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금융실명제, 주력업종 제도,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지혁. 1988. “한국 아당의 계급적 성격에 관한 시론적 분석.” 이진경·임지혁 편. 『민족자본가 논쟁』 . 버리.
- 장상환. 1993. “신경제-재벌의 의기투합.” 『진보저널』 제14호.
- 전창환. 2004. “1980년대 발전국가의 재편, 구조조정, 그리고 금융자유화.” 유철규 편.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 함께읽는책.
- 정진화·김상조. 1996. “신경제정책하 한국경제와 1996년판 경제위기론.” 『동향과 전망』 .
- 정영태. 1995. “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유성.” 『동향과 전망』 .
- 정태인. 1993. “개혁실종, 표류하는 신경제.” 『말』 .
- 조영철. 1998. “국가후퇴와 한국 경제발전모델의 전환.”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 당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대한민국정당사 제3집 (1980-1988)』 .
- 지우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 책세상.
- 채만수 · 김장한 편. 1990. 『한국사회통일전선논쟁: 현대계 통일전선운동의 쟁점과 그 전망』 . 죽산.
- 최장집. 1991. “지역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기능.” 『지역주의연구』 . 학민사.
-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 나남.

Bob Jessop. 1990.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Nicos Poulantzas. 1973.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London: New Left Books.

Nicos Poulantzas. 1976. *The Crisis of the Dictatorships* (2nd edition). London: New Left Books.

Abstract

Sung-Soo Kim • Sin-Hui Yoo

This paper will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of emerging class struggle of Korean society during the Kim Young-Sam regime by using capitalist state theory of Greek philosopher Nicos Poulantzas. Having democratization the hegemony of Chaebol was exposed to popular resist. In return, Kim's government tried to reconfigure a fundamental economic structure through so-called Chaebol reform. Although Min-ja party was formed, there still remained three different factions. Elected president Kim as his supporting partisans, the Min-chu faction(of democratic liberal party) which were advocates of small and medium sized capitalist classes, were in essential antagonism with another faction of their party, Min-chung, representing the monopolistic capitalist classes. Thus the reform of Chaebol could be construed as class struggle between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and monopolistic capital. Consequently, the state apparatus reflected the class struggle which exists simultaneously in political and civil society.

Key words: Capitalist state, Kim Young Sam regime, Small and medium sized capitalist classes, Class struggle , Cheabol reform, Nicos Poulantzas